“시민과 함께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모임 외출 ‘자제’ · 2m 건강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시민 동참 당부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100만 원
4월 6일부터 구·군·주민센터 신청

코로나19 청정지대 ‘클린존’ 확대
방역 강화·지역 확산 차단 ‘전력’



부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민생대책을 시행하고 있다(사진은 명륜동 한 상가에 착한 임대인 운동 감사 플래카드를 내건 모습).

■ 부산시 코로나19 극복 온 힘

부산지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이제 겨우 한숨을 돌렸을 뿐 방심해서는 결코 안 된다. 소규모 감염이 계속되고 미국과 유럽, 일본의 감염병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더욱 세심한 주의와 경계심이 필요하다.

부산시·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강조

부산광역시는 오는 4월 6일 초·중·고교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급하지 않은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인후통·근육통 등)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 △생필품 구매·의료기관 방문·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 거리두기 등을 실천하는 것이다.

직장에서 개인행동 지침은 △탈의실·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컵·식기 등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퇴근 이후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등이다. 사업주는 △밀집된 근무환경 최소화를 위해 직원 좌석 간격을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점심 시간 조정 △출장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회의는 전화 통화나 영상회의 활성화 △직원이나 시설방문자 대상 매일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유증상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등을 지켜야 한다.

정부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함께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3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함께 종교·체육·유흥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종교·체육·유흥시설은 이용자가 마스크를 써야 입장할 수 있고, 이용자 간 1~2m 간격을 유지하게 하는 등 엄격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지자체는 위반 시설에 집회·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별자금 지원 등 서민경제 활력 회복 총력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방역 강화 등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서민경제 활력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3월 24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8만5천585명에게 긴급 민생지원금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사업장과 주민등록 모두 부산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4월 6일부터 구·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긴급 민생지원금은 재난구호기금과 예비비 등을 활용했으며 재원의 20%에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사진은 부산이 본사인 한국예탁결제원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마스크를 쓴 채 충분한 간격을 두고 업무를 보는 모습).
사진제공·국제신문